관리운영권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뉴스초점 광주 2순환도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맥쿼리 상고… 대법재판 앞두고 市와 3500억 세금절감 논쟁

강시장 "자본구조 원상회복 않을시 매입절차 곧바로 착수"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해당구간 민자사업자인 맥쿼리가 대법원 상고를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일단 연간 200억원대의 재정보전금이 걸린 관리운영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리운영권 매입에 총력=광주시는 관리운영권 매입에 총력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관리운영권 매입을 위해 자본구조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매입절차와 함께 공익처분 방식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미 자본구조 원상회복 치유기간인 90일 중 62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민자사업자측이 판결문 송달 후 28일 이내에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시 곧바로 매입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특히 "원상회복 절차에 따른 매입 외에도 공익처분을 통해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수 있다"며 "상대측이 또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공익처분의 사유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이 제2의 매입방안으로 공익처분까지 제시한 것은 맥쿼리측에서 매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처분은 자치단체에서 민간투자사업이 공익에 현저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기획재정부 내 민간투자중앙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의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자치단체의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공익처분이 되면 민간투자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해당 사업의 관리권이 자치단체로 넘어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원상회복 절차에 따른 매입은 민간투자사업의 평가금액 중 80%만 지급하면 되지만, 공익처분에 따른 매입은 100%를 모두 줘야한다.

◇시민혈세 절감 놓고 논란=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광주시와 맥쿼리간 시민 혈세 금액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등 기싸움이 한창이다.

시는 이번 승소로 3479억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입장이지만, 맥쿼리는 시민 세금 절감과는 관련이 없는 소송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양측의 공방은 세금 낭비에 대한 여론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맥쿼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대로 자본구조가 원상회복되더라도 광주시의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맥쿼리 측은 "광주시의 재정부담액은 통행량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회사 내 자본구조 변경 등 재무 구조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맥쿼리측의 주장은 지난 2001년 광주시와 협약 체결 당시 2011년 기준으로 인구 230만명, 통행량 1일 평균 9만4000대로 추산한 용역결과에 따라 예상 통행량의 85% 미만일 경우 시에서 재정을 보존해 주기로 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맥쿼리는 이번 광주시가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계약 당시 재정 보전금, 즉 시민 세금 부담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광주시는 승소 여부와 관련없이 계약기간인 2028년까지 예상통행량의 85%인 7만9000대에서 실제 현 통행량 기준 3만7000대를 뺀 1일 4만 2000대분의 통행료를 보존해야하며, 승용차(1대당 1200원) 기준으로 하면 1일 5000여만원, 연간 2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맥쿼리측의 주장대로 현재로선 시민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으나, 제2순환도로를 매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시에서 보도자료로 밝힌 3479억원대의 세금 절약 등은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할 경우 예상되는 이익으로, 해당 도로를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만일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운영권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시민 세금을 절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다만 "맥쿼리측은 시민이 낸 통행료와 재정지원금으로 시설운영을 해야 하지만 왜곡된 자본구조로 이자를 빼돌렸고, 적자구조를 만들어 수십억원에 이르는 법인세와 주민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승소에 따라 세금도 누적 이자까지 고려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액의 세금을 절약 또는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승소의 의미를 부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해 전남 이주 외지인 5175명

귀농·전원생활형 93%… 화순·장성·장흥 順

지난해 전남으로 이주한 외지주민이 5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5175명으로 2012년 3459명보다 1716명이 늘었다.

전남으로 이주한 외지인이 연간 5000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시·군별로 화순군이 748명으로 가장 많고 장성군 579명, 장흥군 409명, 영암군 378명, 무안군이 364명 등이었다.

이주 유형별로 귀농형 2958명(57%)으로 절반을 넘었고 전원생활형 1864명(36%), 요양형 292명(6%), 문화예술활동형 61명(1%) 순이다.

귀농 이주민은 지난 2008년 840명을 기점으로 2009년 924명, 2010년 1019명, 2011년 1474명, 2012년 3459명, 2013년 5175명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청정 자연환경과 비교 우위에 있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 전원마을과 농어촌 뉴타운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도시민 농어촌 유치사업도 한 몫을 했다.

이주 전 거주지는 광주가 2005명(38.7%)로 가장 많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989명(38.4%), 영남권 294명(5.7%), 충청권 209명(4.1%), 강원·전북·제주도 등이 678명(13.1%)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1729명(33.4%), 회사원 1374명(26.6%), 공무원 179명(3.5%), 교직원 86명(1.7%), 예술인 28명(0.5%) 순이었다.

이주 가구수는 2863가구로 평균 가족 수는 1.81명으로 집계됐다.

명창환 전남도 안전행정국장은 "베이비붐 세대 등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도시민 귀농과 귀촌에 차질이 없도록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 도시민 지원시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의 세 번째 추기경에 임명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13일 서울 명동성당 서울대교구청 주교관 앞마당에서 열린 임명축하식에서 정진석 추기경 등으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높아진 한국천주교 위상… 종신직·교황 선출권 가져

3번째 추기경 의미와 역할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의 세 번째 추기경을 임명한 것은 높아진 한국 천주교의 위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새로 임명된 추기경 19명 중 아시아지역 출신은 한국과 가톨릭이 국교인 필리핀뿐이란 점이 이런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정진석 추기경이 서임된 지 불과 8년 만에 새 추기경이 나온 것도 이 같은 분석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정 추기경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서임된 지 37만인 지난 2006년 추기경에 임명됐다.

한국 천주교는 1784년 평신도에 의해 자발적인 천주교 신앙공동체가 탄생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됐다. 또 전통적인 그리스도 문화권이 아님에도 교황청에 내는 납부금 규모가 세계 8~9위, 신자 수도 500만명에 달하는 등 세계 가톨릭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추기경 서임과 관련 앞으로 아시아와 세계 교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해 달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낮은 곳을 지향하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앞으로 한국 천주교가 이런 쪽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번 임명에 담았다는 것이다.

최근 개혁 성향의 추기경 임명을 위한 청원운동 등 천주교 일부에서는 다른 요구가 있었음에도 현직 서울대교구장인 염 추기경을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관례를 택했다는 해석이다. 서울대교구는 한국 16개 천주교 교구의 뿌리이자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 새로 임명된 추기경들도 그 나라의 대표적 교구를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 추기경은 서임되는 즉시 추기경단 특별법에 따라 교황 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추기경의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교황 선출로 80세 미만 추기경이 선거권을 갖는다.

일단 추기경으로 임명되면 추기경으로서 신분상의 지위는 종신직이다. 하지만 80세가 되면 법률상 자동적으로 교황 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직무가 끝난다.

이에 따라 1931년생인 정진석 추기경도 2012년 염 추기경에게 서울대교구장 직을 물려주고 은퇴했으며, 80세가 넘어 지난해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삼형제 사제' 순교자 집안… 비교적 보수 성향

염수정 추기경은

한국 천주교 역사상 세 번째 추기경인 염수정(71·안드레아) 추기경은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의 시국미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실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제의 몫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사제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치구조나 사회생활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한바 있다.

반면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김수환·정진석 추기경을 보좌하기도 했던 염 추기경은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사목자라는 평가도 있다. 특유의 온화한 성품으로 지난해에는 10년 만에 사제 전체 모임을 열어 일선 사제들과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염 추기경은 1943년 경기도 안성의 가톨릭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1970년 사제 서품을 받은 염 추기경에 이어 동생 염수완·염수의 신부도 사제가 됨으로써 한국 천주교 역사상 처음으로 '삼형제 사제'가 되기도 했다. 친척으로는 김순진·염동규 신부가 있고, 손자뻘로는 염영섭 신부가 있다.

염 추기경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대교구 사무처장을 맡아 서울대교구의 운영에 큰 기여를 했으며, 서울대교구 제15지구장 겸 목동 성당 주임 신부를 거쳐 2001년 12월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에 임명돼 2002년 1월 주교품을 받았다. 이후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와 주교회의 상임위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감사 등을 맡았다.

현재는 주교회의 상임위원과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선교사목주교위원회 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

2월10일 개강예정
학원생 모집
강의과목
사주 · 자미두수
육효 · 풍수지리
기초부터 고급까지!!
· 육십갑자 해설 · 자미두수대전
· 잘먹고 잘사는 사주학의 저자가 직접강의
각종생활상담
직업 · 사업 · 궁합 · 택일 · 개업
풍수지리 출장감정
상담 · 소개도 가능
화원 역학 연구원
광주 광역시 북구 임동 92-83
062)527-0755
010-5116-0766
구)나산 클래프 · 전대사거리 · 서림 초교 · 임동오거리 · 본원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중-52297호
老안치료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의원